

전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잇따라

전주시 정책아카이브 도입 · 자원순환 정책 체계화 · 대형 공사현장 안전 관리 강화 등 주문



박형배 의원



이국 의원



천서영 의원



장재희 의원



김학송 의원



최서연 의원



김동현 의원



양영환 의원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 의원(효자5동)은 시민들의 쉬운 정책 접근을 위한 '전주시 정책 아카이브'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실패 사례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서울시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종이팩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체계적 자원순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착되지 않은 분리배출 방식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수거 인프라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천 의원은 "장기 중단된 현상이나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 중단 공사현장 파악 및 점검 대상 관리 △주민 신고 기반 위험 감시 체계 구축 △중앙정부 협력 등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촉구했다.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시행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제도적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전주시 파크골프장의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 부족과 과밀 이용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약 시스템 도입, 전담 인력 배치, 민간 위탁 운영, 유료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최서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은 도시개발 규제완화로 인한 원도심의 불안을 지적하며 공공주도형 정비 방식 도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원도심은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돼 범죄·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주도형 도시정비 방식 전환을 통해 원도심 주민

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의원(삼천1·2·3, 효자1동)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수거보상제는 실효성이 낮다"며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 도입,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수영장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은 약속된 시기를 넘겼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지원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희성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전주시, 시의회 심의 요청

전주시가 가중된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정부의 추경에 발맞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지방비 10%가 부담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조율을 거쳐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2조 8039억 원)보다 1276억 원(4.55%) 증가한 2조 93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기

간은 정부 방침에 따라 1차분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시는 34개 동 주민센터와 전주시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전주시 거주 중인 모든 시민으로, 지원 규모는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다.

소비쿠폰은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시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경제TF팀(063-281-8731~87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전주시에 거주하는 연탄난방 사용 6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탄소섬유 바닥난방과 장판을 시공, 순간순수기 설치 등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친환경 탄소난방 전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주시 · 시 주거복지센터, 연탄 난방 사용 6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전주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전주시에 거주하는 연탄 난방 사용 6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탄소섬유 바닥난방과 장판을 시공, 순간순수기 설치 등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연탄 난방 사용 가구 탄소난방 전환 사업은 민·관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활동은 지역 탄소 소재 난방업체인 하이하우징과 더데움이 시공을 총괄했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시 에너지센터, 전북대학교 해비타트 동아리, 전북 가정형 Wee센터, 전주 건축학원, 전주시 건축과에서 함께 참여해 주택 내 가구 이동과 폐기물처리, 난방설치 보조 등의 봉사활동에 임했다.

특히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

금회의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에 선정돼 배분 기금이 조성돼 추진된 것으로, 기금과 더불어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 참여단체들의 봉사 와 재능나눔이 더해져 가능했다.

이와 관련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연탄 난방 사용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저탄소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연탄사용 80가구의 주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탄소 난방 전환 △노후 전기교체 △단열 보온 △온수 설비 △태양광 설치 △방역소독, 물품 지원 등 가구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이번 활동은 연탄 사용 가구의 탄소난방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연탄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주택에서의 저탄소 실천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 개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1만여 명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활 정보 제공과 통·번역 서비스, 법률·노동 상담, 한국어교육,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또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

업체 체류 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 지역민과의 사회통합 단계까지 중장기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 운영 첫해인 올해는 오는 12월까지 전주시가족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전주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관으로, 센터 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가족에게 생애주기에 맞춘 폭넓은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는 앞으로 지

역 내 외국인 주민들의 삶이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통 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전주·완주 통합 실천 의지 표명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전주·완주 통합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동의로 상정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발전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비효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극복과 전북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

정구역의 병합을 넘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확대 및 광역행정체제 개편 기조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상생방안 105개 과제를 주요 의제로 인정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며 "지역 구상권 간 신뢰와 공감 속에서 시민을 중심 통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국회 및 정당 대표,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